

[세미나]

## 교육에도 선택할 자유를!

- 일시: 2020년 8월 1일 (토) 오후 4시
-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자유와지성
- 사회: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 ◆ 교육선택권의 허용 범위  
강지원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 ◆ 한국 교육제도의 진정한 문제점  
김영준 SFL KOREA 대표
- ◆ 교육선택권 이전에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자율화부터 시작해야  
박재민 서강대학교 학생
- ◆ 규제 독점의 수월성 교육 시장  
박진우 한양대학교 학생
- ◆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다양성과 평등에 역행한다  
조범수 자유기업원 인턴

[#1]

## 교육선택권의 허용 범위

강지원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평등주의를 신봉하는 식자들에게 교육평준화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테제다. 개인이 사회인으로 성장해가는 긴 과정의 첫 발걸음이 바로 교육 분야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체계를 꾸리는 데 있어서 좌파적 평등주의 이념이 현실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앞선 선결 과제가 될 수도 있다. 교육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야기한다거나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공격들을 이겨낼 때, 평등주의자들은 ‘교육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평등주의는 사회 각 부문에서 성공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교육평준화는 경쟁력 약화와 교육의 획일화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규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진보와 발전을 선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행동을 가로막고 금지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진보와 발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어떤 명분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그 인간보다 뒤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선택권 박탈의 타당한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평준화를 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 역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특목고 폐지 및 지정취소 등 작금의 평준화 정책은 문제를 잘못 진단하여 엉뚱한 곳을 짚고 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실태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은 학교의 특성이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통념을 뒤흔들었다. 흑백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심했던 시절, 미국에서 감행된 제임스 콜먼의 연구는 학교의 특성이 아닌 학생의 의지력, 가정의 영향력, 그리고 교우관계가 학업성취도 결정에 훨씬 지대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학교와 교육에 관한 보편적 진실은, 우수한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이 우수한 학교에 진학할 뿐인 것이다.

평준화를 부르짖는 이들은 경제력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완전히 다른 수준의 교육을 접하게 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지평을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경쟁은 한낱한시에 태어난 동갑내기들끼리만 벌이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개개인은 이 사회에서 자신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창출해나가며 경쟁력을 뽐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연령대나 직업군과 관계없이 사회 속 모든 타인은 잠재적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예비 사회인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지극히 근시안적이다.

같은 이유로 교육평준화에 반발하고 교육선택권의 확대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교육선택권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선택의 자유,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교육선택권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면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교육 체계를 지향하는 이들의 주장 역시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학생’이라는 호칭도 허락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 지칭되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 발전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공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유 역시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배우고자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하고, 원치 않는 곳에 개인의 지출이 강제적으로 동원된다면 그것은 엄연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교육 부문에서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강조할 요량이라면, 내친김에 공교육 폐지와 완전한 자유 교육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출을 감당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이 완전히 일치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선택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유일한 공간일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학교나 교사들이 보다 더 경쟁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평준화에 반대하는 모든 논거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이다. 이사벨 패터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무교육 제도는 전체주의 국가의 전형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교육선택권 확대를 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종국에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어쩌면 공교육 체제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2]

## 한국 교육제도의 진정한 문제점

김영준 SFL KOREA 대표

오늘날 한국의 초중등교육제도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소위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관한 것, 즉 입시학원으로 전락해버린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를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전환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직면하게 되면 보통 이들 학교 유형의 폐지에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 하는 두 입장 중 하나에 서게 되기 마련인데, 그러한 접근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다루고 문제와 얽힌 핵심적인 결함을 빗겨가는 접근이다. 이 글에서는 공교육제도의 문제, 의무교육의 의미, 그리고 학문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 공교육제도의 문제

우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다. 한국은 대학 진학을 중요시하는 특유의 문화와, 정형화된 입시제도로 인해 초중등교육 전체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도록 적응해왔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사학 재단의 지원이나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다른 학교보다 우수한 교원, 교육자재 등을 확보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왔을 뿐이고, 이들 학교가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학교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았을 때 당연한 일이다. 특별히 정부 지원 등을 이용해 명문대 합격자 수를 늘리려고 이들 학교가 갖은 노력을 다했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정말 입시학원화 된 것인지 따져보려면, 그러한 차별화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는 보통의 학교들이 입시학원화 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고등학교는 사실상의 입시학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학생은, 학부모는, 그리고 심지어는 교원들마저도 일반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실상 입시학원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공감할 것이다. 거의 모든 수업이 수능 출제 범위와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교원들 각자의 교육철학이나 학생들 각자의 꿈이 깎 자리는 좀처럼 없다.

심지어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러한 역할을 근처 학원가에 사실상 ‘맡기는’ 교사들도 꽤 있다. 특히 소위 ‘좋지 않은 공부 분위기’의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고, 이는 다시 그런 분위

기를 만드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몰리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혹은 그런 무책임한 교사들의 모습에 공부에 큰 의지가 있었던 학생들조차도 공부를 점점 손에서 놓게 된다. 그런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이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고서 학교 수업으로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자사고, 특목고 등만이 아니라 일반고까지 입시학원으로 전락해버린, 또 전락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형화된 입시 제도를 크게 자율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학이 진정 유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만 잘 보는 학생들이 아니다. 자교의 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사회로 나가 우수한 인재로 제 역할을 다하며 자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하기 마련이다. 대학이 정부의 간섭 없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학으로서는 당연히 시험만 잘 보는 학생보다는 사회에 기여하여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만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선발 전형에 구성할 것이다. 고등학교는 그러한 선발 전형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원들을 모으다보면 자연스레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하게 된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그러할 것이다.

## 의무교육의 의미

초중등교육제도가 대학 입시를 위한 중간단계일 뿐인 것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갖는 의무교육으로서의 명분도 상당히 흐려졌다.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책자나 교과서의 앞부분 등에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과 같은 상투적인 말들이 형식적으로 적혀 있을 뿐이고, 실상 교실 안에서는, 특히 높은 학년으로 갈수록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교육과정은 수능 출제의 5가지 영역,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교원도 그것을 기준으로 양성된다. 교과서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수능 출제 범위를 향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다 상위에 있는 것들의 학습을 예비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의무교육과정이 진정 그 명분을 살리려면, 교육과정의 구성이 대학 입시와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초중등교육이 그러한 시도에 번번이 실패한 것은, 혹은 그러한 시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초중등교육이 자율화되지 못하고 정부의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이 담당해야 할 수요까지 독식하려다보니, 사교육에 요구해야 할 서비스를 공교육에 요구하게 되고, 공교육은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려다보니 본래의 명분을 흐리고 변질되는 것이다. 때문에 의무교육과정이 대학 입시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려면 공교육의 영역이 명확히 한정되어야 한다. 즉, 의무성이 사라져야 한다.

교육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의 의미 중 하나는, 열악한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 혹은 무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에 있다.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겪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상식을 갖고 살도록 길러내겠다는 발상은 사람들의 선호체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재편하여 통일시키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부의 시민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당위는 없다. 정부는싼 값에 공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신 시민교육을 함께 받도록 경제력이 열악한 사람들과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 권력을 통해 상식이 결정되는 사회를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학문의 발전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의 범위 밖에 있는 영재학교가 특히 이 주제와 관련이 깊은 유형의 학교일 것이다. 이들 학교는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들이다. 비슷한 명분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고등교육에서는 카이스트 등의 과학기술원이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과학기술은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발전한다’는 그릇된 상식에 기초하여 등장했다.

정부 지원이 있어야만 학문이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 학문을 더욱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충분한 지원이 학계에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해당 학문은 크게 도약할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지원이 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식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충분하고도 지속적’이라는 조건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이라는 조건은 만족하기 어렵다. 정부 지원은 학계의 유행이나 주류적 흐름, 패러다임 등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에 의한 지원에 동일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의 지원은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온전히 지원자 개인이 지게 된다. 때문에 더욱 모험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보다 전반적으로 해당 학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실패했을 경우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납세자들 모두가 지게 된다. 민주제 하의 사회에서는 표면상으로 그 책임을 관련 당국의 공무원 개인, 더 나아가서는 해당 정책을 추진했던 정권이 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 지원은 모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계에 영향력이 있는, 혹은 주류에 해당하는 학계 내 특정 그룹에게만 지원이 집중되게 된다.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학고등학교는 현재 의대 진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영재학교의 경우 의대 진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라는 대다수 여론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의학도 과학기술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의학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갖는 과학기술에 관한 이미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주류적 의견에 의해 오히려 의학계로 진출하려는 인재들의 움직임이 억압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고등학교 등을 향한 정부 지원이 과학기술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실상 의학에 대한 지원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학고등학교 등을 폐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그러한 성격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다.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이 경제적 안정성을 나름 보장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고, 이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정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이들 인재를 유인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유인이 민간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 반도체나 컴퓨터과학 분야 등에는 인재가 모이는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러한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기술계 전반, 특히 기초과학계를 향한 정부의 독점적 지원을 근절하고, 기초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들 분야에서도 사업 가능성을 포착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3]

## 교육선택권 이전에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자율화부터 시작해야

박재민 서강대학교 학생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소위 ‘교육 일률화’ 흐름이 우리의 교육현장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급변해오기는 했으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10년 이상 운영되어 우리 교육현장에 정착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뿌리를 뽑는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교육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도 거센데, 이미 지난 5월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이 자사고 등 폐지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의 논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곧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볼 것인지, 혹은 현대에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의 일부로 볼 것인지로 설명된다. 교육을 기본권의 일부로 보는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에 시장원리를 대입할 경우 부자는 양질의 교육을, 빈자는 저질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계급을 재생산하여 기존 지배계급을 더욱 공고히할 뿐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 중고등교육까지는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교육’이 옳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과연, 소위 ‘평등교육’이 계급의 재생산을 막고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교육선택권의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이 지지하는, 국가가 독점하는 일률적 학교교육은 오히려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기존의 계급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및 평가방식 등이 이미 기존의 지배계급에 의해 채택된 것이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배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sup>1)</sup>이다. 과거 프랑스의 교육성취와 관련한 조사에서, 사교육이나 지능을 포함한 그 어떤 요인보다도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 ‘부모의 표준어 사용 여부’였다는 결과는 지배계급이 학교교육을 통해 지배계급의 문화자본과 계급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큰 증거가 된다.

따라서 오히려, 이 계급의 재생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각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각 대학

---

1) 단 필자는, 이것이 지배계급의 교묘한 기만이라거나 자신들의 계급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계략이라는 마르크스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무엇을 교육시킬지, 어떻게 학생을 평가할지 판단하는 주체가 지배계급일 뿐이며, 그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내용과 방식이 그들에게 친숙한 내용과 방식이었을 뿐이다.

교가 학생평가방식을 꾸리는 과정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계급을 재생산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그 편성권한을 독점한 채 계급의 재생산 이외 어떠한 가능성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국가의 독점을 깬다면, 문화자본이나 경제자본과는 무관한 요소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단 하나의 대학교만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층 더 계급의 고착화와 사회의 비역동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개혁은 궁극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선택권의 확대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성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교육을 선택하는 주체는 학생이 아닌 그 학부모이다. 학부모의 선택기준은 대체로 선택에 따른 결과, 즉 학생의 대학입시결과 등에 있지 그 과정에서의 학생의 인격적 성장 등은 비교적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영수 교과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고 수시와 정시로 양분되는 대학입시가 다양화된 대학별 별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선택은 단지 우수한 교사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로의 쏠림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들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것이다.

정리하자면 교육이 다양화될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채 교육선택권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선후관계를 바꾸어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진보 교육이념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꿈꾸는 평등교육을 통한 평등사회의 실현은 학교교육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허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들은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불평등사회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계급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다양성을 가진 교육 위에 교육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교육환경이다. 결국 우리가 향후 백 년을 걸어갈 교육개혁의 첫 시작은 국가가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는, '교육과정과 학생평가방식의 자율화'인 것이다.

[#4]

## 규제 독점의 수월성 교육 시장

박진우 한양대학교 학생

시장의 유효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제고한다는 공정거래법의 모순은 그것이 교육 시장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명징해진다.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학교, 자사고 등은 수월성 중등 교육 시장에서 규제 독점 지대를 누리고 있다. 이들만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서 수월성 교육이 가능한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수월성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특목고와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의 독점 공급자이며, 수요자들의 선택권은 크게 제약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법은 이것을 제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 부처인 교육부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 교육이 과연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서비스인가? 주류 경제학에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이거나, 시장 참여자 사이에 극심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거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교육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극심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교육을 통한 지식 생산과 전파에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수월성 교육의 독점 공급을 국가가 조장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상위권 학생들이 향후 지식 생산과 전파의 첨병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수월성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고 교사들은 수월성 교육의 규제 독점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우월적 선발권을 갖고 상위권 학생들을 입도선매하는 바람에 일반고 진학생들의 평균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교육 수준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상위권 학생들의 일반고 기피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일부에선 특목고가 중등 교육 단계부터 금수저와 흙수저의 계층 분리를 강화하여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일견 타당한 부분이 존재하는 불만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대안은 고교 평준화다. 모든 학교가 똑같이 선발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서비스라는 더 큰 범주로 치환하면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규제 독점이 존재할 때 해결책은 규제 장벽을 제거하여 시장의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일반고 측의 주장은 ‘수월성 교육’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일반고에서 수준별 학급 편성이 제한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고 측의 지저분한 본심을 간파할 수 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피곤하지만, 우수 인재가 강제 배정 또는 추첨을 통해 자기 학교에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성품 좋고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을 가르쳐 편하게 일하고 싶지만, 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 인재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 자신이 임용 고시를 본 이유는 해고의 걱정 없이 정년까지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인데, 그런 경쟁을 왜 해야 하나? 이런 저질 심보인 것이다. ‘날로 먹겠다’는 것이다.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것이다.

수월성 교육 시장의 규제 독점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선발권을 부여하고, 모집 단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수 인재의 선택을 받으려는 치열한 경쟁이 중등 교육 전반에 널리 퍼져야 한다. 학비가 저렴한 일반고 중에서도 일류 명문이 등장할 수 있으니, 계층 분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단적으로 고교 평준화 이전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였던 경기고등학교는 공립 고등학교였다.

이런 식의 경쟁이 이뤄지면 분명 3류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도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학교는 여기서 학교명을 밝힐 수는 없으나 일반고 평준화가 이뤄진 현재에도 존재한다. 한편 학력 미달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력 수준 신장, 진로 지도 실적, 우범 학생 선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학교별 예산 배분에 차등을 두거나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학교 간, 교사 간의 경쟁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의 학생 수준과 상황별로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다양성과 평등에 역행한다

조범수 자유기업원 인턴

내년부터 대원국제중학교과 영훈국제중학교가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필자의 모교인 용인외대부고도 역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송문고, 배재고, 이대부고 등 9개교는 지금까지 행정소송 중이다.

다원주의적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는 정책은,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관치교육의 폐단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교육부가 정하는 교과내용을 그들이 허락한 방식대로 가르치고, 그들이 결정한 평가 방식대로 재단하도록 '모든 학교'에 강요하는 것이 과연 다원주의에 부합하는 교육 제도인가? 자사고나 외고는 공교육의 획일적 구조에서 학교와 학생들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였다.

물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들도 충분한 수준의 자율을 누리지 못한다. 특정 과목에 최소 이수 시간을 규정하거나, 학교가 해외어학연수와 같은 특정 활동을 주도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학교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자사고는 분명 정부의 규제를 적게 받는다. 혹자는 자사고와 외고가 소위 '대입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말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교육과정 상 고등학교의 주된 기능은 단연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는 것인데 직무유기를 하라는 것인가. 다만 자사고는 학생들의 대입을 도우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생회를 조직하고, 자유롭게 동아리를 만들어 서로 협력·경쟁하고, 학교 안팎에서 행사를 여는 등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육의 역동성을 키워갈 수 있다.

많은 논자들은 바로 그런 교육을 '있는 집안' 자제들만 받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한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도 더욱이 더 많은 학교들에 자율을 허하고 외고나 자사고처럼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려면 공교육 제도 전반이 대대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지만 말이다. 신라호텔의 애플망고빙수를 소수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못 팔게 해버리는 심보로 빙수 시장에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의 핵심은 기득권들의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데에 있다. 마치 부유층의 '전유물'인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면 교육 평등의 대동 사회가 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불평등은 교육을 평준화했을 때 심해진다. 자사고와 외고가 없어진다면, 강남 8학군 학교들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강남 8학군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입학이 어렵기 때문에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게 된다. 강남 집값은 또 한번 폭등하면서 경제 불평등도 동시에 가중될 것이고, '그들만의 리그'는 철옹성처럼 두터워지게 된다. 현재 외고나 자사고에는 물론 부유층 자녀들이 많겠지만, '강남 8학군'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계층과 소수의 저소득층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있다. 여러 부차적인 입시 제도나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어디 강남 8학군 학교 뿐이겠는가. 자사고나 외고와 같은 수월성 교육의 창구를 막아버리면 해외 유학이나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치솟게 된다. 값비싼 비용에 따른 해외 유학과 국제학교 진학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할 때 이는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다. 대표적으로 송도에 위치한 채드워 국제학교의 학세권은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이미 쏠쏠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일반고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가히 지리멸렬하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무책임한 정부는 일반고 교육의 실패 원인을 외고와 자사고에서 찾는다. 하지만 사실 일반고의 실패는 공교육 레짐의 인력 총원 방식이나 예산 조달 방식, 교육과정 등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자연스러운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연공서열제나 교원순환제도를 비롯해서 교육 공급자들의 경쟁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들이 공교육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는 이유는 현 정부 고위직들의 자녀 다수가 특목고나 국제학교, 또는 해외 보딩스쿨을 나왔기 때문이다. 당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두 자녀가 모두 외고를 나왔고, 광노현 전 교육감의 아들도 외고를 나왔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라디오 방송에서 "양반제 폐지는 양반이 주장해야 설득력있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그는 두 아들을 고등학교에 보내기 훨씬 전부터 평등주의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스스로 '양반'이 되길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결국 이러한 정책의 본질은 '사다리 걷어차기' 자체다. 자기 자식은 수월성 교육으로 명문대에 보내놓고 이제 와서 '수월성 교육은 안된다'며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절대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사다리를 많이 만드려는 생각은 안한다. 그저 썩은 동아줄만을 내어주며 생색을 낼 뿐이다.